

통합위, 「대·중소기업·소상공인 상생동반 협의체」 출범

- 경제단체·유관기관 참여, 상시 소통 기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
- 상생협력 분야 주요 현안 논의 통해 경제 양극화 완화 기반 마련

-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(위원장 이석연, 이하 '통합위')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분야 주요 단체·협회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「대·중소기업·소상공인 상생동반 협의체」(이하 '협의체') 1차 회의를 개최하고,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- 이번 협의체는 대기업·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 경제주체 간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자급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,
 - 개별 정책이나 단일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주체 간 갈등과 구조적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.
 - 중소기업중앙회, 소상공인연합회, 한국경제인협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비롯해, 중소벤처기업연구원,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.
 - 이번 협의체는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 조율과 상생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정례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,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한편, 우수 협력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.

-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기존의 대기업 주도, 제조업·수도권 중심의 협력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주체와 업종,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포용적 상생협력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.
 - 특히, 협의체 논의주제 선정을 위해 ‘공급망 기반 상생협력’, ‘온라인플랫폼 거래환경 개선’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.
- 통합위 관계자는 “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는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산업구조,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”고 진단하며, “경제주체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양극화 완화의 중요한 기반”이라고 강조했다.
 - 이어 “이번 협의체는 대기업·중소기업·소상공인 관련 협회·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협력 구조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,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위가 조정과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통합위-중소기업중앙회 간 간담회에서 제안된 ‘(가칭)모두의 성장위원회 구축’ 건의를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,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·기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민통합위원회 양극화대응정책과	책임자	과 장 오승준 (02-2100-3451)
		담당자	사무관 이윤정 (02-2100-3453)